

가을철 산불, 예방부터 대응까지 빈틈없이

-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10.29), 가을철 산불 예방·대응태세 점검
- 산불 조심 기간(11.1~12.15) 운영, 신속한 진화·선제적 대피로 피해 최소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9일(목)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가을철 산불방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산불 예방·대비·대응체계를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 기후적 요인과 함께 영농부산물 소각 및 단풍철 등산객 증가 등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11.1. ~ 12.15.) 동안 연평균 44건의 산불이 발생해 21ha의 산림 피해가 집계되었다.

특히, 가을철은 봄철과 함께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예방부터 초기 진화, 주민대피까지 관계기관 간 빈틈없는 대비와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앞두고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36개 관계기관과 함께 기관별 역할과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대책지원본부’를 상시 운영해 산불 상황을 밀착 관리하고, 관계기관 간 대응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산불이 확산되거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기관별 대응을 총괄 조정하고, 현장상황관리관을 즉시 파견해 현장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 예방·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산불 발생 시에는 진화 헬기 등 가용 자원을 신속히 투입하고, 확산 우려 시 선제적 주민 대피를 실시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산림 인접 지역의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집중 추진해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 차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설비 주변 위험목 제거와 국립공원 내 불법 소각 등 화기 사용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국방부는 군 헬기 143대의 즉응태세를 유지하는 등 군 자원을 활용한 진화 지원체계를 갖추며, 소방청은 동원 소방력을 확대 운영해 가을철 산불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적 참여도 중요하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 행위를 금하고, 산불이나 연기를 발견하면 즉시 119 등에 신고하는 등 산불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봄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산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만큼, 가을철에도 이러한 협력체계를 이어가야 한다"라며, "산불 발생 시 초기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히 대응해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사회재난실 환경산림재난대응과	책임자	과 장	안길주 (044-205-6170)
		담당자	사무관	고용석 (044-205-6171)

